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전북도-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협업체계 구축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구직 촉진금·취업 지원금·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도내 3만여명 혜택

전북도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첫날부터 본격 시행한다.

도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구직자와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자 등이 지원대상이다.

전국적으로 총 59만 명에 1조1,500억 원가량 지원될 것으로 보이며, 도내에서는 3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도는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 촉진금을 지원하는 I 유형 ▲소정의 취업 지원금(6개월간 170만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II 유형으로 나뉜다.

I 유형은 가구소득이 1인 기준은 월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기준의 경우 월 244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가 해당된다.

이들 중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 촉진금을 받는다.

또한, 1:1 심층 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과 일 경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비록, 최근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되며, 특히 청년은 취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득 기준을 완화해 선발 지원된다.

II 유형은 소득수준이 구직촉진 수당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취업 취약계층으로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약 488만원 이하이면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진단·검사 비용, 역량향상 비용 등을 포함해 월 최대 28만4,000원씩 6개월간 총 170만원의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미취업 청년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I 유형, II 유형 모두 취업에 성공해 장기 근속할 경우 6개월 근속 시점에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점에서 100만원씩 총 150만원의 취업성공 수당도 지급된다.

단, 이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만 대상이며, 1번 이용할 경우 3년 동안은 다시 이용할 수 없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모집과 발굴을 위한 홍보와 지역 내 적합한 일자리 알선 등에 노력하

며, 빈틈없이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내 고용센터와 함께 도·시·군 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전담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홈페이지(www.korea-ua.com)를 통해 가능하다.

지난 28일부터 온라인 사전 예약신청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도는 소득과 재산요건을 자가 진단해 신청하면 빠르면, 내년 1월 중에 구직촉진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고용센터는 전주와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정읍, 고창, 부안 등 8곳에서 운영 중에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민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기회와 격려가 될 것"이라며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대대적으로 홍보 활동도 펼치고, 사업 초기 혼란을 최소화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촘촘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고용위기 극복 역할 '특목'

212개 신규 일자리 창출·맞춤형 지원으로 기업 매출 상승 성과

전북도가 올해 추진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이하 지산맞 사업)이 산업 수요에 맞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고용 위기 극복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도는 올해 지산맞 사업 9개 프로젝트를 추진해 신규 일자리 212개를 창출하고,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통한 기업 매출 상승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지산맞 사업은 자치단체가 지역 비영리법인·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 및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다.

도는 올해 지산맞 사업 공모에 참여해 지역혁신프로젝트 등 9개 사업, 사업비 20억원(국비 16억원 포함)을 확보한 바 있다.

지역 산업의 일자리 문제를 진단하고 구직자 취업 경쟁력 강화, 기업 구인난 등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올해 도는 중점 추진했다.

대표 사업은 농생명·농식품·신재생에너지 등 전략산업 연계한 일자리 창출사업, 혁신도시 이전지구 수요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청년정책 연계

풀패키지 지원사업 등이다.

이를 통해 전략산업 육성과 고용정책을 연계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212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 기업 53개 사에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으로 매출 상승효과까지 견인했다.

특히, 도는 전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들과 활발한 협업 활동을 펼쳐 사업 효과를 높였다.

지산맞 사업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친환경농업 인증비 지원 확대

전북도가 친환경농업 인증 지원을 확대한다.

도는 친환경농업의 생산·가공·유통 주체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등 '2021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을 개선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는 매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민간 인증기관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신청료와 심사관리비 등으로 건당 4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을 건당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도내 4,200여 친환경인증 농가의 경영비 2억1,000만원 정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인증비용 지원대상을 '유기가공식품 및 취급자인증'까지로 확대했다. 이번에 확대되는 '유기가공식품'은 유기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가공·유통하는 제품이다. '취급자'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품의 포장단위를 변경하거

나 단순 처리해 포장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미국종합처리장, 농산물 유통업체 등이 해당한다.

현재 도내에는 유기가공식품 68개, 취급자 142개 업체가 있다.

신규로 지원되는 유기가공식품 및 취급자 인증 비용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85% 수준으로, 유기가공식품의 인증비는 건당 100만원, 취급자 인증비는 건당 55만원으로 결정됐다.

지원 신청은 인증심사 등을 거쳐 인증을 받은 후, 농지 등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사업 신청서와 인증서 사본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유호상 기자

이경신 전주시의원, 감사장 수상



전주시의회 이경신 의원이 30일 효자한강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지역사회발전과 노인공경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의원이 지역 숙원사업 해소, 노인 복지 증진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 입주민의 마음을 담아 감사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경신 의원은 "감사장 수여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더욱 힘써달라는 의미로 알겠다"며 "어르신들의 웃음꽃이 활짝 피고 누구나 살고 싶은 효자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완산구, 제설 취약구간 비상용 염수분무장치 설치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황권주)는 용머리고개와 예수병원 앞 등 고갯길에 비상용 염수분무장치를 상시 배치하는 등 강설에 대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완산구는 제설차량의 투입 지원을 보완하고 제설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 염수분무장치를 시범 설치했다.

염수분무장치 설치로 동 주민센터 관리지는 제설차량이 신속히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장치를 활용해 신속하게 제설작업에 나설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염수분무장치가 설치된 곳은 ▲예수병원 앞(서원로) ▲용머리고개(용머리로) ▲마당재(아중로) 등 3곳 6개소로, 경사도가 높은 곳에 위

치한 노송동·완산동 주민센터에는 염수탱크(1000L)가 배치됐다.

구는 염수분무장치의 효과를 분석해 제설취약지역에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구는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으로 단계별 비상근무체제를 구축하고 관내 69개 노선 312km 구간을 제설할 수 있는 제설장비 15대와 백호, 염수교반기 등 52대의 부속장비도 갖췄다.

특히 올해는 전년과 달리 제설차량 2대를 추가로 확보해 간선도로를 비롯한 이면도로 제설을 더욱 강화했으며, 염수탱크를 주요지점에 설치해 신속한 제설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역대 최고'

전북도, 전년보다 14.3% 높은 7만5140원 결정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이 역대 최고매입 가격인 7만5,140원(40kg 배/1등급 기준)으로 결정됐다.

전북도는 안정적 벼 생산과 쌀 수급 유지를 위해 매입한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이 전년보다 14.3% 높은 가격으로 결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매년 수확기(10. 5. ~ 12. 25.)의 전국 평균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올해 산지 쌀값은 생육기의 잦은 강우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쌀 생산량이 다소 감소되며 평균 21만

6,484원(80kg)에 거래되고 있다. 이번엔 농식품부가 결정한 2020년 산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전년보다 1만원 정도 높은 역대 최고의 매입가격으로 도내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이 결정됨에 따라, 기존에 지급된 중간정산금(3만원/40kg)을 제외한 추가지급금은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별로 연도 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지난 9월부터 공공비축미 수매를 추진해 6만4,873톤의 매

입을 완료했으며, 수매등급도 특등급 및 1등급 비율이 전년보다 증대됐다고 발표했다.

이와 별도로, 피해벼의 전량매입을 농식품부에 지속 건의하고, 농식품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태풍 등에 의해 품위에 영향을 받은 피해벼 105톤도 별도로 전량 매입을 추진했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상기후에 의한 쌀 생산량 감소로 인해 벼 재배농가의 어려움이 많았지만, 역대 최고의 공공비축미의 매입가격 및 매입등급 결정으로 안정적 경영기반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한 투기조장행위 합동점검

전주시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국토부·전북도, 과열 양상 뚜렷한 아파트 단지 중심 단속

전주시가 국토교통부, 전북도와 부동산 투기조장행위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섰다.

전주시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단장 배희곤)과 국토교통부·전북도는 30일 삼천동과 송천동 등지에서 공시지가 1억원 미만 아파트 단지 거래 건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합동점검을 했다.

시는 취득세 증가대상에서 제외된 공시가 1억원 미만 부동산 중 단기간 내 실거래가가 급상승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과열 양상이 뚜렷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단속을 펼쳤다. 세부적으로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매수 건 ▲미성년자 관법증여 의심 거래 건 ▲업·다운 계약 의심거래 건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무자격 중개행위, 부동산 투기조장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시는 향후 의심거래 건에 대해 자금출처와 조달증빙자료 등 소명자료를 징구한 뒤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토 결과 명의신탁 약정 등 부동산 선법적행위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에는 과태료를



전주시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과 국토교통부·전북도는 삼천동과 송천동 등지에서 공시지가 1억원 미만 아파트 단지 거래 건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합동점검을 했다.

부과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급증한 전주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시는 지난 23일 생태도시국 생태도시계획과에 공무원과 부동산 거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을 신설했다.

배희곤 단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차단, 올바른 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특별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투명한 거래를 통해 실거주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한옥마을 외연 확대 위한 보행환경 개선 추진

전주시가 대표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주변 환경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시는 내년 6월까지 10억원을 투입해 전동성당 앞부터 사전다리까지 팔달로 왕복 600m 구간에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옥마을 여행객의 동선을 서화동 예술마을, 남부시장, 완산도서관 및 꽃동산 등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걷고 싶은 길로 탈바꿈하는 계획이다.

시는 전통과 문화가 깃든 자재를 활용해 보도를 포장하고, 담장 옆 등 자투리 공간은 보도면보다 낮게 배치해 녹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전과 전동성당 등 역사적 자원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면서 전통미를 가미해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달 전라감영부터 완산교 교차로 500m 구간의 기존 15m 차도를 8~9m로 줄이고 양쪽에 3m의 보도를 신설한 뒤 화강석으로 포장하는 전라감영로 특성화사업을

완료했다. 도로 위 전선은 지중화했으며 이팝나무를 심고 가로등과 보안등을 설치하는 등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었다.

행정안전부의 보행환경 특화지구 시범사업도 따내 총경로 일원 등 2.7km 구간에서 명품 보행환경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또한 시는 야간에 안전하고 고품질스러운 산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남천교부터 사전다리까지 280m 구간과 자민벽화마을에 경관조명을 설치했으며, 내년 2월까지 인근 웨딩거리 가로수에는 LED 경관조명을 설치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하세요"

전북도는 '2021년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는 축사가 있는 시·군 축산부서에 2021년 1월 22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축산업 허가증,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신용조사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대상자 선정은 사업신청서 검토를 거쳐 2월 초에 결정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지원보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지원해 지역사회의 더불어 사는 축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악취저감시설(ICT악취측정장비, 밀폐시설, 배출구 탈취시설 등)설치계획이 없는 농가는 신청서에서 제외하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부지확보와 인·허가가 완료된 농가를 우선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용자 80%, 자부담 20%로 중소규모 대상의 경우 이차율은 연리 1%, 대규모 대상은 연리 2%이며,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동일하다.

도는 지난 23일 비대면 설명회를 갖고 시·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방향 및 접수 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해 원활한 신청·접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유호상 기자

이명연 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이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정책 제언 전달 받아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전북도이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완진)으로부터 이동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제언을 30일 전달받았다.

이명연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이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이동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제언을 30일 전달받았다.

이명연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이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이동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제언을 30일 전달받았다.

정책 제언문에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아동의 안전 보장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 설치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시설 확보 ▲전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개정 촉구 등이 있다.

이명연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이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이동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제언을 30일 전달받았다.

이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아동의 안전 보장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 설치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시설 확보 ▲전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개정 촉구 등이 있다.

이명연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이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이동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제언을 30일 전달받았다. /유호상 기자